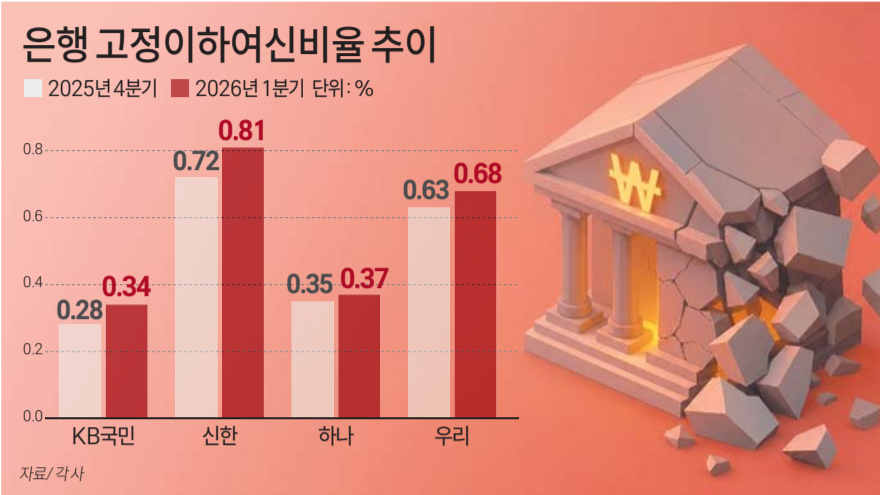


0%대 연체율에도... 고금리·경기둔화에 잠재 부실 '꿈틀'

빚 갚기 어려운 사회 연체율과 부실채권

은행 1분기 연체율 0.32~0.39% 고정이하여신 규모·비율 늘어
‘생산적 금융’ 기조 맞춘 기업대출 향후 건전성 부담 요인 가능성
중소 신용위험 높아질 수 있어 하반기, 잠재부실 향방 분기점



은행권의 연체율은 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부실채권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와 달리 잠재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자영업자 취약차주·중소기업의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0.32~0.3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0.28~0.34%)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연체율 이면의 부실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NPL) 규모와 비율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은행권의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4463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1672억원)과 비교해 24%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같은 기간 0.28%에서 0.34%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지난해 말보다 968억원 증가한 1조1540억원을 기록했다. NPL비율은 같은기간 0.72%에서 0.81%로 0.09%포인트(p) 올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0.35%에서 0.37%로, 우리은행은 같은기간 0.63%에서 0.68%로 각각 상승했다.

은행권의 연체율 자체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 부실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자영업자대출 부실 가능성을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확대해온 점도 향후 건전성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주요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194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감소 영향으로 183조4000억원에서 18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45조5000억원에서 146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87조8000억원에서 193조4000

억원으로 5조6000억원 급증했다.

하나은행 기업대출도 전분기 대비 3조2260억원 늘어난 179조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과 법인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기업대출 증가가 향후 부실 확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과 건설업,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시장 인콰에선 올 하반기가 은행권 잠재부실의 향방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채권 증감 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자체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기업여신 증가세가 이어진 만큼 향후 건전성 지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지선 앞두고도 ‘부동산 정상화·머니무브’ 강조

SNS에 부동산 탈세 기사 공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것”
“반도체 빼고도 코스피 지수 4100”
현 정부 성과 절하에 불쾌감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부동산과 증시를 연달아 언급하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현안 언급을 꺼리는 선거 직전임에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강조하며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이 담겼다. 특히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 허위 계

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후 꾸준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약 1년 동안 40여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엑스에 올리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반도체 중목을 제외하면 코스피가 사실상 4100~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증권사 연구원 보고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축구 실력을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아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핵심 중목을 제외하면서까지 현 정부의 성과를 절하하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 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등 핵심 중목을 제외해도 코스피 지수가 4100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상승세를 반도체 착시 효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요지로도 해석된다.

통상, 선거 기간에는 주거나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 셈이다. 이는 어려운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형성되는 상황을 두고, 투기 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코스피 지수를 같은 날 언급하며 자산시장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하고, 8788.38로 마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금가분리’ 장벽 낮아지나... 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속도

하반기 예정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금가분리 원칙 점진적 폐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권 진출을 가로막았던 ‘금가분리’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도입했던 금가분리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요 금융사들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본확보 경쟁에 뛰어 들면서다. 올 하반기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금융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28일 국내 거래량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 2%를 확보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금액은 약 3100억원으로, 삼성증권은 투

자의 목적을 가상자산사업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확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국투자증권도 해외 거래소 OKX와의 협약을 통해 코인원의 지분 20%를 확보했다.

국내 금융권은 올해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5일 1조원 가량을 투자해 두나무 지분 약 7% 확보했으며, 20일에는 기존 두나무 주주였던 한화증권이 추가 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10%까지 늘렸다. 올해 초에는 미래셋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코빗을 자회사로 인수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금가분리’ 원칙이 폐지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가분리 원칙을 명시적으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가분리는 2017년 가상자산 투기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표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가분리 원칙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과 함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거래 허용·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내용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

AI·반도체 장밋빛 전망 속 ‘과열’ 우려도

>> 1만 ‘10% 급등 ‘34만전자’...’서 계속
코스피 질주의 배경에는 AI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증시가 AI 랠리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한 결과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처리, 자산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도 한몫했다.

다만 이면에는 ‘과열’과 ‘반도체 쏠림’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 업황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화학·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의 이익 비중은 2021년 18%에서 2025년 3%로 급락했다. 유진

투자증권은 이날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4100~4200으로 추정된다”며 “2025년 이후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주가 부진은 올해 더 심해지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논란은 사회적 측면과 더불어 주식시장에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이라는 분석에 대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아래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